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부와 교육감들에 분노하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관련 기사 4, 5, 10~11, 12면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4, 5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12면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6~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2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북·미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는
대통령 말은 참인가?

3면

온라인 기사

- 우석군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기고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2)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연재 기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은
다음번호로 넘깁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G20 회담이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북반구와 제3세계의 주요 경제국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담은 2008년 금융 붕괴 시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방 선진 공업국가가 모이는 기존의 G7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다.

이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소위 “신흥시장국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응집력 있는 연합을 형성하지 못한 탓도 있다. 최근 들어 G20은 세계 경제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터가 되었다.

군사 전략 연구가 에드워드 루트악은 이를 “지리경제학적” 충돌이라 했다. 다시 말해 국가 간 적대감이 주로 국경과 무기 체계가 아니라 (물론 이 또한 존재하지만)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주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중국에게 미국의 수출품을 더 많이 강매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진핑이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메이드인차이나 2025” 사업을 좌초시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목표를 배경으로 트럼프는 중국의 거대 IT 기업 화웨이를 공격하며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는 무역전쟁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금지했다.

5월에 두 나라의 협상이 결렬되자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무역전쟁이 악화될 조짐이 보였다. 트럼프는 2000억 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고, 관세 인상을 3000억 달러어치 수입품으로 확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6월 28일~29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별도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중국

은 미국산 대두 2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해 타협을 시사했다.

두 거인의 싸움터

미국 대두 농가들도 화웨이처럼 미·중 무역 전쟁의 주요한 불모였다. 중국은 생활 수준이 향상해서 육류 수요가 증가했고 사료용 대두 수입이 크게 늘었다. 중국 시장은 세계 대두 무역의 60퍼센트를 차지한다. 지난해 6월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브라질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공급처를 갈아탔다.

이번 대화 재개가 그저 제스처에 불과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1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했지만 근래 무역협상은 실패했다. 트럼프의 북한 방문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에게는 핵무기 개발에 관해 감정을 압박할 경제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은 흥미로웠

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말처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몰두하면서 다른 G20 국가들이 양국 모두에게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역학관계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일본 쓰쿠바 시에서 열린 G20 경제장관 예비회담에서 중국은 산업 보조금과 철강 설비 과잉 문제에서 자기 편을 찾지 못했다. 한편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협조를 거부해 왔는데 말이다.

이는 트럼프 하의 미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이끄는 전통적인 리더 구실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남긴 공백을 다른 G20 회원국(특히 주최국 일본)이 메우려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무역 연합인 유럽연합이 자기 문제로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곧 공석이 될 유럽연합의 주요 직책을 둘러싼 다툼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이런 상태의 징후다.

더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세계경제라는 무대에서 미국이 만든 규칙에 따를 생각이 없는 강력한 플레이어의 성장했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정권이 그 규칙을 찢어버리고 있다는 점 또한 불안정성을 키운다. 그러나 다른 주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선호하는 자가 트럼프 대신 백악관을 차지했어도 지금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걸린 판돈은 바로 미국이 지배적 자본주의 국가로 남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61호 / 번역 최병현

트럼프의 이주민 탄압, 민주당은 거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맞섰다

김준효

6월 말 방한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휴전선이야말로 “진짜 국경”이라고 칭송했다. 전 세계에서 지상군이 가장 밀집해 있어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을 미국-멕시코 간 국경으로 삼고 싶다는 말이었다.

바로 그 국경을 헤메쳐 넘던 엘살바도르 이주민 아버지와 두 살배기 딸이 안타깝게 익사한 지 1주일도 채 안된 때였다. 가난과 절망을 피해 온 중미 이주민들을 막겠다고 군대를 보내고 발표를 지시했던 자답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국경 순찰대 CBP는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의 국경진입을 단속했다.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법에 비춰도 위법이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

되면 최소 2000명이 즉시 추방돼 기아·빈곤·질병·인신매매의 위협으로 내몰릴 것이다.

용케 추방되지 않고 구금 시설에 갇힌대도 여전히 위태로운 처지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구금된 이주민 중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그중 부모와 생이별한 아이들도 있었다. 최소한의 식수·음식·의약품도 없는 수용소에서 이주민들은 폐렴 같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 나갔다.

그런데 6월 26일 미국 상원은 트럼프가 제출한 46억 달러 규모의 국경 통제 긴급 예산 편성 법안을 찬성 84표 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다른 척했지만, 이주민 단속 예산 통과에는 한통속이었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다음 날인 27일 하원에서 찬성 305표 대 반대 10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어서 얼마든지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이주민 단속 예산안도 트럼프 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다.

1년 반 전에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를 가결하는 데 뜻을 같이했던 민주당·공화 양당이 잔혹한 국경 단속, 이주민 사냥, 야만적 수용소 건설에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침대가 있든 없든 수용소는 수용소”

트럼프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민 단속에 도전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들이었다.

6월 26일, 미국 유명 가구 유통업체 웨이페어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웨이페어가 신축 이주

민 구금 시설에 침대 납품 계약을 맺은 일을 규탄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납품 계약 철회, 철회 불가 시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 단체 ‘난민·이주민 교육·법률 서비스 센터’(RAICES)에 기부할 것 등을 요구하며 웨이페어 본사 건물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다.

웨이페어 사측은 침대 판매 수익 절반을 적십자에 기부하겠다고 노동자들을 무마하려 했지만,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침대가 있든 없든 수용소는 수용소다”, “수용소에 아이들 가둔 데서 수익 얻는 회사 필요 없다.”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 소속 웨이페어 노동자들이 파업을 주도했다. DSA 소속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것이 바로 연대의 참모습”이라며 투쟁을 지지했다.

트럼프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민 탄압에 맞서 미국 노동자들이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항공사 아메리카에어라인 노동자들도 자사 항공기로 단속 구금한 이주민 자녀들을 수용소로 이송하지 말라고 사측에 요구하며 폭로전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인종차별에 맞서고 트럼프의 이주민 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런 시위와 운동들이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줬, 자신의 작업장에서 중요한 정치적 항의 행동에 나서게 했다. 이런 항의 정서를 의식한 미국 대형 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민영 이주민 수용소와 계약한 기업에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래로부터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 더 전진하기를 바란다. 미국 노동자들의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연대는 한국 노동자·좌파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다.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북·미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는 대통령 말은 참인가?

김영익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다. 회동을 제안한 트럼프조차 1시간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올지 확실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단기간에 결정돼 급작스레 성사된 만남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중단된 북·미 공식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다.

협상 재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서,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고 긴장이 다시 쌓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이것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변함없었다. 지난해 7~12월 미국이 추가한 제재 조처는 12건이나 됐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도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됐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5월 트럼프 정부는 석탄을 운송하는 북한 화물선을 압류했다. 6월 19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으며 러시아 금융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이날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제재는 군사적 조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그 동맹국 합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감시한다며 한반도 인근 해역과 동중국해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이기도 하다.

한미연합훈련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5월 주한미군사령관은 대규모 훈련은 아니지만 “필수 임무 수행을 위한 [연합훈련]을 올해에만 100번 이상 진행했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잇달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 온 것이다. 단지 북한의 일방적 ‘도발’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긴장이 다시 쌓여가는 상황보다 남·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나은 일임은 분명하다. 대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북·미 적대관계 종식”? 그러나 한반도는 세 정상의 의지만으로 좌우되는 곳이 아니다

재개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들뿐일 것이다.

이제 세간의 관심사는 다시 재개되는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도.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친 일이 이번에는 재현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란

이번 판문점 회동으로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쏠린 미국 국내의 시선을 일순간에 자신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가 이만자 부녀 역사 사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 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갑자기 판문점 회동을 제안한 것은 단지 국내정치적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미국 권력자들은 제한된 역량으로 자국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두고 크게 고심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중 이란 문제가 있다. 트럼프는 대이란 강경책을 밀어붙여 왔고, 결국 폭격 10분 전 상황까지 갔다. 폭격은 결국 취소됐지만, 당분간만 취소일 가

능성도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악화시킬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란과의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로서는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게 당분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파격적인 만남에 부합하는 파격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중단된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양측 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은 까닭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잠시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해, 미국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 갈등은 다시 점증할 공산이 크다.

계속 점증하는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은 한반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미 협상이

협상 테이블 바깥의 상황 때문에 흔들릴 여지가 많은 것이다.

분열

미국 권력자들이 대북 정책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해 있는 점도 북·미 협상의 변수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이 판문점 회동을 연일 비난하는 것은 시사적이다.

7월 1일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도 대북 정책을 놓고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일부 고위 관리들이 포괄적 합의의 첫째 단계로서 북핵 동결과 미국의 보상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트럼프 정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즉시 부인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대북 정책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당분간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영변 외 핵시설”을 계속 문제 삼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단지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것이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고 했다.

이 점은 향후 북·미 실무협상에서 우여곡절이 계속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핵화의 정의부터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의 순서 등 양측이 앞으로 합의해야 할 쟁점들이 산적하다. 그 순서가 “단계적”(북한)이나, “동시적”(미국)이냐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합의와 합의 이행의 속도도 쟁점이다. 판문점에서 트럼프는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재와 군사 위협에 시달린 북한에게 “속도”는 꽤 중요하다.

실무협상에서 잠정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그때마다 “검증” 문제가 빠짐없이 등장할 것이다. 과거 북핵 협상이 “검증”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된 적이 많았다.

북핵 협상 외의 문제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핵무기와 그 유관시설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 밖에 인권 문제 등 미국이 북한에게 들이밀 카드는 핵무기 외에도 많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벌써 세 번이나 만났지만, 그새 북핵 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거의 없다. 냉정하게 말해, 부시 2세 행정부 때에 견줘도 더 나은 합의와 문제 해결 수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미 협상은 가다 서다를 거듭할 공산이 크다.

7월 2일 문재인은 이번 판문점 회동이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하노이 실패로 가는 과정을 봤으므로 문재인보다는 훨씬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에 제국주의 갈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 점은 평화를 위해 외교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가리킨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좌파는 남·북·미 대화를 응원하거나, 그 성공을 위해 시스템에 협력하는 데 역량을 투여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항구적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반제국주의적·반자본주의적 운동을 건설할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문재인, 트럼프 정부의 패권 전략에 협력한다고 공언하다

세간의 시선은 판문점 회동에 쏠렸으나, 트럼프의 방한 목적이 단지 김정은과의 만남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문재인은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지역적·세계적 문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즉, 미국의 패권 전략에

적극협력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거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협력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고 직접 말했다. 2017년 트럼프 방한 때 문재인은 중국을 의식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오만 해역에서의 통항의 자유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통항의 자유는 미국이 이란 등과의 갈등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협력할 여지를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트럼프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

려면 미국의 패권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 같다.(노무현도 본질적으로 이런 논리를 댔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진정 도움이 될까? 미국의 중국 포위에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불안정 해소에 도움될 리가 없다. 미국은 중국 포위 전략과 대북 정책을 분리해 다루지 않는다. 6월 초 미국 국방부는 중국 포위 전략

을 소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했다.

이런 사례는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협력과 양보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 얼마나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구상으론 항구적 평화를 구현할 수 없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돼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에 나서다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커녕 완강하게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교육청에 맞서 3일간 파업을 벌인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민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비정규직 대물림 끝내고 싶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2만여 명 정도가 서울로 상경합니다.

3일간 하는 파업은 처음인데, 급식 노동자들은 방중에 급여가 나오지 않아 파업이 생계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파업 3일과 방학 기간을 포함하면 열흘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도 놀랄 정도로 조직이 많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안 물려주겠다는 심정으로 합니다. 이전 단지 합리화가 아니에요.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오래 일했어요. 근무 경력이 25년이네요. 노동조합에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자기 자식 중에 혹시 학교로 비정규직이 대물림 돼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큼니다. 학교에서 차별을 끊어 내고 학교에서부터 없애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거기에 우리 노조가 소개되면서 2012년 파업 장면이 4쪽에 걸쳐 실려 있어요. 참 좋았습니다. 파업, 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해 교육하는 거 보니 다행이다 싶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싶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니다.

간부들이 중심이 돼서 100인 삭발을 했어요. 집에 말도 못 하고 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는 4번째 삭발인데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안 좋아요. 이번에도 간부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기차가 멈췄으면 한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큼 절박함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학교비정규직 16만 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며칠 만에 학부모 2500명이 지지 서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셨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요?

차별이 가장 힘든 고통이고 불만이에요. 노조 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못 했어요. 무기계약직이 됐어도 입학생 수가 줄면 바로 해고됐어요. 그래서 매년 3월,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급식

실은 ‘한 명 해고다’ 하는 분위기가 돌아요. 그래서 눈치 보고 한마디도 못 하는 거죠. 이런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해고는 막고 있어요. 해고를 안 당해도 여전히 차별이 있죠. 학교에 층층이 서열이 있고 우리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9급 공무원 80퍼센트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요구해요. 이전 대통령님이 말한 ‘공정임금제’예요. 한 번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우리는 95퍼센트가 여성이고 대부분 가정주부들이에요. 급여가 늘면 생계가 나아지는 거죠.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 말하는데, 급여는 비정규직 최하위 수준에 있어요. 무기계약은 매년 계약서만 안 쓸 뿐이에요. 동일노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80퍼센트 수준은 돼야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노동조합 하기 전에는 50퍼센트 정도였어요. 지금은 60~70퍼센트 사이예요.

그런데 저처럼 근무 오래할수록 격차가 커져요. 저는 60퍼센트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전 너무 불합리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고 없어요. 교육공무직이라는 조례로만 각 시도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을 바꿔서 교육공무직을 넣어 이틀이라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 여섯 자 넣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지 20년 넘게 살아와도 유명입니다.

정부가 임기 동안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고 했는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눈속임이죠. 오죽하면 100여 명이 삭발을 했겠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하고 학교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이들을 만나는 돌봄

교사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그래도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머리를 깎았는지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파업을 지지한다고 게시판에 써 주는데 이런 게 큰 힘이 됩니다.

최저임금 개악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보고, 믿고 정말 환호했어요. 적어도 임기 안에는 1만 원이 되겠구나 했죠.

[지금은] 민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에요. 벌써 임기 3년째인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후퇴하는 안을 내놓으니 언제 [1만 원으로] 오를지 모르죠. 너무 화가 나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개악을 하니]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교통비, 식비를 산입하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요. 매달 6만 7000원이 줄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기죠. 임금을 올린 것처럼 해 놓고 뒤로는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임금은 더 하락한 거죠.

조합원들은 임금이 올랐다는데 왜 달라진 게 없느냐고 해요. 설명해 주면 우리 속인 거냐고 묻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믿음이 깨지면서 맥 빠지더라고요. 우리 노조만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면 정부가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11명이 협약서까지 썼는데 한 명도 안 지켜요. 교육공무직화[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 80퍼센트 약속 다 했어요.



김민지

그런데 지키지도 않고 답합해서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집단교섭을 제안했고 노조도 산별교섭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우리를 길들이려 하고 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2달 반 동안 절차 협의만 하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실무 교섭을 처음으로 했는데, 기본급 1.8퍼센트 인상안을 가져왔어요. 공무원 올리는 만큼만 올리겠다는 거죠. 이럴 때만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공무원 임금 동결할 때 우리도 동결됐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교육청 과장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더니 결국 가져온 안이 이거였어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직무급제 도입하려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무급제와 같아요. 유형별로 나눠서 1유형, 2유형 등 4단계로 나뉘어지죠. 이미 임금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나누려고 하는 건지, 임금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기관에] 적용된 거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응이에요. 평가를 기초로 해서 등급 나누는 거니까 기본 나쁘죠.

[교육부] 용역 내용 보니까 평가, 승진으로 [임금] 정하고, 숙련이 필요 없는 일이니 해마다 임금 올릴 필요 없다고 해요. 급여가 매년 오르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 2년이나 3년 만에 오르도록 돼 있어요. 이런 독소 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상황인데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교육공무직제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 방향이라 그런 것 같아요. 교육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는데 교육부는 정부 아닌가요? 기재부 핑계만 되면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파업위원회 위

원장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 우리 파업 앞두고 수장을 구속한 거 보고, 우리 파업을 방해하고 겁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공공기관 대표 기관인데 정부는 임기 안에는 어렵다고 장기 플랜으로 5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나 싶어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더 살았습시다.

우리가 노동조합 하면서 의식 변화를 통해 세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요. 50대 여성들 의식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변화를 계속 이끌면서 이 세상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큰 구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거추장스러운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부는] 우리가 꺾일 거라고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다면?

이번 총파업에 언론이나 학부모, 학교 현장 아이들이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3일 파업 동안 학교에 아이들만 남겨 두고 나와 눈에 밝히지만, 파업 후에 돌아가 정성을 담아 아이들을 보살피겠다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차별만큼은 정말 없게끔 만들 수 있게 파업 승리가 고 간다고 약속하고 싶어요.

정부는 [우리가]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끔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어쩌다 비정규직이 됐고,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발을 디디고 나니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게 가슴이 아프고 세상이 왜 이럴까 생각해요. 비정규직도 국민이니까 사담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 투쟁의 길에 밀거름이 되는 임무가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무년수가 올라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

김민지

더는 임금·처우 차별 안 참겠다는 학교 비정규직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임금 인상, 조건 개선 ‘이젠 끝’이라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분노가 굉장합니다”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파업의 의의를 말씀해 주세요.

각개전투하기보다 단합해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학교, 시도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까지. 이런 점에서 예년에 비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은 모여서 연대해 왔어요. 지난해 대표적으로 잡월드, 마사회 싸움 등에도 계속 함께하며 연대해 왔죠.

이게 더 확장돼 민주노총 내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이 하나로 뭉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제로 싸우는 것이니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전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비정규직 철폐예요.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임금제’인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을 보장하라는 거죠.

하루 아침에 공정임금제 80퍼센트 하기 어려우니 3년 안에 로드맵을 가지고 완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력이 오래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교육감들이 답함해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올렸으니 그만 하라’는 식입니다.

그간 부단히 싸웠지만 힘의 관계상 기본급은 못 건드리고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올려 왔어요. 이제는 노조가 힘도 생기고 기본급을 높이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기본급 6.24퍼센트 상향하는 싸움을 하려고 해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정부나 교육청은 ‘이제 그만 큼이면 됐어, 이제는 끝’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교육청도 밀리지 않겠다고 대동단결하고 나오니까 현장의 분노가 폭발하고 끝을 봐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청들이 [우리의 요구를] 계속 거

부하면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 다. 우리는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이고 싸워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6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겨냥한 거죠.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전체 노동계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조업 분야를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도 줄이는 등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싼 임금으로 저질 일자리를 확대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월 임금 200만 원 언저리 되는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고착화하려는 것은 안 됩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가 호봉제 최소화, 차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름을 뭐라 부르든 직무급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임금 체계]는 이미 직무급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영양사·강사 직군 같은 유형의 임금체계 하나, 행정·교무나 급식실 유형 하나, 감시·청소·시설 같은 특수직군 하나, 전문성을 가진 임금체계 하나. 이렇게 이미 기본급 자체가 다른 임금체

제가 기본으로 네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속수당을 20년 상한으로 묶어 뒀어요.

직무급제라는 건, 근속에 따라 임금이 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인상이 낮아지는 방식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직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니까요. 결국 정규직과의 격차는 무시하고 현재 [임금] 수준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근속 상한을 풀어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게 싸움의 화두인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부가 용역을 줬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직무급제예요. 이걸 공개하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 폐기 아닌 폐기가 된 거죠. 그리고 교육부가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보자며 교육청들과 노조가 함께 논의해 보자고 해요. 여기에 응했지만 얼마만큼 우리 요구가 들어갈지는 미지수죠.

우리의 기본 입장은 ‘정규직 임금 80퍼센트인 공정임금제’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임금체계에나 시도교육청들이 얘기하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얘기 꺼내는 것을 막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가 계속 탄압만 받아 위축돼 있었다면 뚫고 올라오기 어려웠겠지만 투쟁이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한 조직이라 ‘가만히 있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시는 예전으로



김민지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큼니다.

지금 조금 더 밀어붙여 바꿔야만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자리를 줄 수 있지 않나, 우리라도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된 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학교가 온전히 돌아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구호가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인데 이 구호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된 느낌 이랄까요. 현장이 빠르게 바뀌고 제대로 불 붙었다고 해야 하나.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느낌입니다.

올해는 집단교섭 3년차인데, 절차 협의만 세 달을 했어요. 교섭 한 번 못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투 태세를 갖춰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상당히 큼니다.

특히 교육청들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최저임금과 우리의 임금이 같이 묶이게 됐어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속수당이 오르게 돼 있어 최저임금이 묶여 버리면 근속수당이 묶이게 되고 기본급 상향도 어려워지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을 얘기하는 순간 내 임금을 정부가 묶어 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 버려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된 거죠.

조합원들이 열 받아 하는 노동개약 중 하나는 파업시 대체근무 투입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전 급식실이나 돌봄을 멈추는 등 학교를 멈추는 우리의 파업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협도 2년에 한 번씩인데, 그 교섭도 교육청들이 계속 끌어서 3~4년씩 가는 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4년마다 한다고 하면 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식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직접 관련돼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이]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문제, 교육청들의 노동자를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 노동 개약. 이것이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 요점이지요.

문재인 정부의 후퇴, 배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특이 문재인 대통령이 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컸습니다. 최저

임금 1만 원, ‘공정임금제’(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비정규직 제로화 등. 우리가 원하던 목표를 ‘춷발 대통령’이라고 자처한 민주당 정부가 먼저 얘기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기대가 사라지면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분노치가 더 높은 거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싸운 만큼 될 것이라고 봤었으니까요.

정규직 전환 심의할 때만 해도 기대가 있어 현장에서 투쟁 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기다려 보자는 현장 정서가 있었어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문재인 정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이제는 기대가 분노로 전환되면서, 아마 올해 유례 없이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해서 가장 길게 총파업을 할 것이고 그 이후도 현장의 분노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간 학교 비정규직은 투쟁의 잠재력,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현실로 보여줬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자부심이 크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급식 여성노동자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해 성장한 케이스예요. 처음 눈을 뭉칠 때는 잘 안 뭉쳐지지만 잘 다듬고 만들어 눈을 굴리면 굴릴수록 배가 되죠. 우리는 이렇게 조직됐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주체다’라고 얘기하며 점차 성장해 학교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 불렀고 한 곳 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육공무직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처우가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에 걸맞는 처우가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무직, 즉 처우가 괜찮은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 처우뿐 아니라 전체적 입지, 포괄적인 사안까지를 다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인터뷰·정리 이정원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 활동 중인 학부모와 학생

김민지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강동훈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이하 존칭 생략)는 지난 5월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포함한 임금 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다시 그가 최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할 수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

《임금, 가격, 이윤》에 대한 건강부회 식 해석

지난 기사에서 나는 한지원이 《임금, 가격, 이윤》의 한 문구를 인용하며 자신의 '임금 인상 투쟁 무용론'의 근거로 삼는 것을 비판했다. 한지원은 이를 반박한다며, 내 주장이 《임금, 가격, 이윤》에 대한 "피상적 이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마르크스는 오언주의자 웨스턴의 임금투쟁 무효론과 영국 노동조합의 임금투쟁 물입을 동시에 비판하기 위해 땀땀을 썼다."

두루 알듯이, 마르크스는 임금 투쟁만으로 자본주의(임금 제도)를 철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한지원이 인용한 것처럼 《임금, 가격, 이윤》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 계급의 종국적 해방을 위한, 말하자면 임금 제도의 궁극적 철폐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패한다."

그러나 내가 이 한 문장의 의미를 둘러싸고서만 한지원에게 반론을 쏘던가? 물론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문장만 인용하는 식으로 《임금, 가격, 이윤》의 논지 전체를 왜곡하는 한지원을 비판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인용을 "문맥에서 완전히 떼어 낸"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 가격, 이윤》의 내용 전체(사실 한지원이 인용한 한두 문구 정도를 빼면)가 임금 투쟁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존 웨스턴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임금, 가격, 이윤》이 발간된 1865년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1857년 경제 위기가 끝나면서 1860년대 초부터 각지에서 파업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모처럼 활발하게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에 약입항을 줄까 봐 마르크스는 웨스턴의 임금 인상 투쟁 무용론을 비판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봤다.

한지원이 인용한 구절만 보아도 마르크스가 임금 인상 투쟁이 쓸모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유격전(임금 인상 투쟁)에만 자신을 국한하면...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금 인상 투쟁 이상의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지, 임금 인상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임금, 가격, 이윤》이 발간된 역사적 맥락과 그 소책자의 전체 취지

서 그는 나의 비판(강동훈,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를 수 없다', <노동자 연대> 287호)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마르크스를 인용하고 있지만, 건강부회와 아전인수로 써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계급투쟁의 의의를 계속 폄하하고 있어, 그 정치적 결론은 부르주아 경제학이 제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와 비판의 분량, 심지어 한지원이 인용한 문구의 내용 등을 종합해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 살펴봐도 마르크스는 임금 인상 투쟁 무용론을 비판하려고 《임금, 가격, 이윤》을 썼다. 이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한지원도 "마르크스는 오언주의자 웨스턴의 임금투쟁 무효론과 영국 노동조합의 임금투쟁 물입을 동시에 비판하기 위해 땀땀을 썼다" 하고 말한 것 아닌가(강조는 인용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마르크스의 《임금, 가격, 이윤》을 자신의 임금 인상 투쟁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정후적 독해'를 한 것이라고 호도할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식의 해석을 '건강부회'라고 부른다.

《자본론》의 결론을 부르주아 경제학처럼 만들다

한지원은 마르크스의 임금 이론을 잘 이해하려면 《자본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임금 이론을 이렇게 정리한다.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을 하락→투자 감소→산업예비군 증가→일자리 경쟁→임금 하락→이윤을 회복'이라는 동역학이 작동한다. 의지 임금을 하락시키려는 반작용이 일 본주의 구조는 이윤을 동역학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 주장의 문제점이 "실은 임금 수준이 오로지 투쟁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는 내가 "[한지원 주장의] 가장 큰 난점은 바로 임금이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약입항을 줄까 봐 마르크스는 웨스턴의 임금 인상 투쟁 무용론을 비판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지원의 반박은 단순히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일 뿐이다. 나는 '임금 수준이 오로지 투쟁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에서 나는 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의 다음 부분을 인용했다.

"**시대의 경향이 그러하다는 것**(상대적 과잉인구로 임금이 최소 한계까지 억눌린다"고 말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에서 나는 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의 다음 부분을 인용했다.

다는 것을 뜻하는가? 만약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만다면, 그들은 구제할 때 놓친 파탄자의 무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강조는 강동훈의 것)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한 '사태의 경향이 그러하다는 것'이 바로 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낳으면 이는 다시 임금을 하락시키려는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나는 한지원이 말하는 "동역학"을 부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마르크스를 인용해 노동시장의 반작용과 이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지원이야말로 "구조"(시장의 반작용)와 "의지"(계급투쟁)를 대치시키고 있는, "임금 수준이 오로지 투쟁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잘못된 허수아비를 나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임금 이론은 "구조"와 "의지" 중 "구조"를 선택하는 것인데"고 말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에서 나는 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의 다음 부분을 인용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력의 가치 규정에는 역사적·도덕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역사적·도덕적 요소"에는 노동자 투쟁의 누적된 효과도 포함된다. 이 점은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마르크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이다. 마르크스는 노동력 가치의 결정 요소로 '역사적·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임금이 노동자들의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임금철칙설'을 반박했다.

임금기금설

이처럼 마르크스는 임금 결정 요소로 시장의 작동과 계급투쟁을 모두 말했다. 한지원처럼 둘을 대치시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한지원은 이 둘을 대치시키는가? 임금 결정에서 계급투쟁의 요소를 부정하고 시장의 작동만을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 주장을 '임금은 오로지 투쟁'으로만 결정된다는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 이를 격파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임금 결정 요소로서 계급투쟁 같

은 "역사적·도덕적 요소"를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너무도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한지원은 임금 결정의 요소로서 "역사적·도덕적 요소"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의 임금 이론은 마르크스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것과 비슷해진다.

지난 글에서 한지원은 임금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만큼만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비판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은 시장의 반격을 받는다고 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임금철칙설'을 반박했다.

물론 이 뒤편장은 틀렸다. "노동생산성에 비해해 임금이 상승"(착취를 불변해도 불변자본 투자량에 따라 이윤율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오류가 있다.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해해서만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은 임금을 '노동의 가치(대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해서는 왜 대답이 없나?

한지원은 내가 지난 기사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비판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추이' 그래프이다. 그는 이 중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추이' 그래프에 대해 "노동자 연대가 그려놓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임금 인상 투쟁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내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전혀 되지 못한다. 이미 지난 기사에서 내가 이렇게 썼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은 함께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 간격은 때로는 더 좁아지거나 넓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반대로 향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함께 오르내린다는 내 지적은 바로 한지원이 주장한 임금기금론이나 정규직 양보론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지원은 이 점은 보지 않은 채, 자신의 한임에 맞는 임금 격차에만 주목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한지원이 노동소득분배율이 20여 년간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하지 않는다. 이 그래프가 착취율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반박인데도 말이다. 그는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2~3년간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시장의 반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본론》 중 상대적 잉여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은 임금의 절대적·상대적 크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착취율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임금, 가격, 이윤》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예컨대 8이라는 주어진 숫자가 있다고 하자. 이 숫자에는 절대적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의 상대적 한계가 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만약 이윤이 6이고 임금이 2라면, 임금이 6으로 증가하고 이윤이 2로 감소할 수 있으며, 그레도 총액은 여전히 8이다."

사실 마르크스가 임금을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라고 정의하는 것이 뜻하는 바 하나는, 임금이 내세우면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한다. 반면, 한지원(과 사회진보연대)은 마르크스의 주장을 임금기금론으로 왜곡하고서는 이를 근거로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온건파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부담으로 여기며 소극적일 때 한지원은 '노동생산성에 비해하는 임금', '전체 생산물 중 일정 비율로 정해진 임금'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거듭 하면서, 마르크스가 비판한 부르주아 경제학으로 후회하고 있다.

반면 한지원(과 사회진보연대)이 마르크스의 임금 이론을 '임금기금론' 식으로 왜곡하는 점이나, 국민총소득을 전체 취

업자 수로 나눈 연봉 5000만 원을 '공정한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과연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착취받고 있다고 보는 의구심이 든다.(한지원과 사회진보연대는 자동차산업 1차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으면서 이들의 투쟁도 폄하한다.) 한지원(과 사회진보연대)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를 이전받아,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에서 내가 이렇게 썼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은 함께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 간격은 때로는 더 좁아지거나 넓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반대로 향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함께 오르내린다는 내 지적은 바로 한지원이 주장한 임금기금론이나 정규직 양보론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지원은 이 점은 보지 않은 채, 자신의 한임에 맞는 임금 격차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해관계

물론 마르크스의 관점으로 볼 때,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마르크스는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상업노동자들이 착취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는 그들도 착취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업노동자의 노동 덕분에 상업자본가들이 잉여가치 중 일부를 이윤으로 전취할 힘이 생기며, 상업노동자의 임금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으로 억제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상업노동자가 상업자본가의 착취에 맞서 싸우는 것도 완전히 정당하다고 봤다.

물론 상업노동자와 상업자본가를 불러낸 나의 유추가 엉뚱하고 넘겨짚기 식인 추론으로, 사회진보연대의 주장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회진보연대가 착취받고 있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폄하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사회진보연대는 기업주 언론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반대하거나, 부모 기업의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노동자연대 같은 좌파들의 주장을 반박할 때 '현세를 낭비한다'며 하는 주장을 고스란히 반복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이런 주장을 보자면, 사회진보연대에게서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세급이라는 것도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일 뿐이다. 이를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이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지출 또는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은 모두 임금몫을 늘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해야 할 것은 세급을 최대한 이윤몰아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반대할 일은 아닌 것이다.

▶ 7면에서 이어짐

임금 투쟁의 “도덕적·정치적 결과”(마르크스)를 고려해야

한지원은 자신과 나 사이의 쟁점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 실제 시장이 목표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임금 투쟁의 성과는 “실제 임금이 그만큼 오르느냐”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동훈은 결과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내걸고 투쟁하는 과정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지원이 쟁점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한지원의 난점을 보여 준다. 이런 관점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 성장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임금 투쟁은 단지 경제적 성과를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론 임금 투쟁은 통상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 조건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투쟁을 하다 보면 연대와 집단적 자부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처음에 들고 나왔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만큼이나 중요해지게 된다(특히 임금 투쟁이 파업을 동반할 경우 이런 효과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인한 온갖 고통을 참아 내면서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고,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다. 단지 자신의 일터에서 임금 투쟁을 할 때조차도 이 투쟁은 노동자들을 자신의 사용자와 주변 동료뿐 아니라 자본가 계급 전체와 노동자 계급 전체를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국가의 본질에 대해 눈뜨게 만든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항상적 전쟁” 속에서만 노동자들이 노예와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반대로 나는 임금의 상승과 하락의 교대, 그리고 그에 기인한 고용주와 노동자들 간의 지속적 갈등은, 산업의 현재 조직에서 노동계급의 정신을 지탱해 주고, 노동자들을 지배계급의 침탈에 대항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으로 단결시키며, 노동자들이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 없는 잘 먹인 생산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 우리는 그[파업과 결사] 경제적 결과들이 겉보기에 하찮다고 해서 그것들에 눈감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그 도덕적·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즉, 한지원의 주장과 달리 마르크스

는 임금 투쟁의 성과와 관련해 단지 경제적 결과뿐 아니라 의식과 조직의 발전이라는 “도덕적·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임금 투쟁을 “시시포스의 노동”이라고 불렀다. 그리스 신화의 등장 인물인 시시포스는 신으로부터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돌을 정상에 올리면 돌은 다시 밑으로 굴러떨어진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을 밀어올리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즉, 임금 투쟁은 올려놓아도 굴러떨어지는 돌처럼 한계가 명확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노동자라면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엘리트주의

그럼 “시시포스의 노동”은 무의미한 것인가? 오히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임금 투쟁 같은 “일상의 실천인 투쟁이 …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임금체계를 폐지한다는 최종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모로 보나 고전적,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임금 투쟁에서 얻는 경제적 성과에만 의의를 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기사에서 일상적인 임금 투쟁 속에서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건너뛰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한지원을 비판했다. 같은 이유에서 나는 **실사** 한지원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투쟁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쟁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한지원(사회진보연대)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계급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그간의 주장과 실천을 보건대, 한지원(과 사회진보연대)은 ‘과학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노동조합 기구를 이용해 교육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소외와 파편화 경험과 이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지배자들의 더 체계적이고 거대한 기구들에 맞서, 교육과

선전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공상적이다. 이런 생각은 노동자들이 일상의 투쟁 속에서 겪는 승리의 희열과 쓰디쓴 패배의 경험 속에서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고, 실수와 오류를 정정하며 효과적 대안을 찾아 나아간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엘리트주의일 뿐이다.

물론 한지원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확대했는가? 또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제대로 연대했는가? 물론 이런 상황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투쟁들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지 이런 투쟁 자체를 폄하해 일축하고, 오히려 투쟁과 연대 자체를 가로막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인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적잖은 활동가들조차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보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함 — 일상의 투쟁에서 연대를 구축해야

끝으로, 한지원이 내 질문에 침묵하며 답변하고 있지 않은 것이 또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지원은 경제불황기에 임금 투쟁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지도 못하고,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축소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곧바로 시장의 반격을 당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들이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에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물론 이 방법은 시장의 반격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이윤 확대를 위해 임금 상승에 반작용한다면서, 도대체 일자리 확대에는 반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면 시장의 반격을 극복



김종현 기자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임금을 계속 올려 나가면 자본주의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만큼이나 허황하다.

그럼에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지원(과 사회진보연대)이 자본의 이윤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나눔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사실 그들이 계급투쟁의 의의를 폄하했을 때 그 논리적 결론은 노동자 사이의 나눔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한지원과 사회진보연대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투쟁을 도려냄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부르주아 경제학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지원은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에서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과학

적’인 것인 양 생각하는 듯한데, 이런 관점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관계를 끊어 버린 알튀세르 식 과학 개념일 수는 있어도,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밝힌 개념은 결코 아니다.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일급 경제학자들도 밝히지 못한 문제들을 마르크스가 해결한 것은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통해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키고, 그 힘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국가를 구축해 자본주의를 철폐한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진보연대가 이론과 정치 모두에서 계급투쟁의 의의를 깨닫고, 노동자들의 일상적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한다 | 편집자 논설

임금 투쟁은 노동계급 투쟁의 필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다

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가격 인상을 부르지는 않는다. 가격과 임금 모두 자본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과 임금은 근저에 있는 가치를 따르며, 가치는 상품에 담긴 사회적 필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

한 사업장의 임금은 나머지 사업

장의 임금 삭감을 대가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 인상의 대가는 자본가의 이윤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추출하는 잉여가치의 양을 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인상 투쟁은 자본가를 희생해서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시킨다.

자본가는 되도록 임금을 낮추려고

애쓴다. 인플레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변화, 시장가격의 변동, 경기순환, 이 모든 것이 임금을 낮추는 압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반격하고 노동자의 처지가 절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임금 인상 투쟁을 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가격

을 두고 자본가와 다뤄야 할 필요성이 스스로를 상품으로 팔아야 하는 노동자의 처지에 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총 생산이 증가한다. 총 생산이 증가하는데도 임금이 정체하면 늘어난 부는 전적으로 자본가에게

갈 것이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할 뿐이다.

노동자들이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도 올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 인상 투쟁은 노동계급 투쟁의 필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다.



군중중군중

대우조선 매각 위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 시작

일자리 파탄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

박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유럽연합·일본·중국 등 해외 5개국에도 곧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인수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세계 1·2위 기업(현중과 대우조선)의 합병에서 뜨겁게 부각되는 핵심 절차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매각-인수합병 추진에 거침이 없다. 지난 5월 말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한 데 이어, 6월 초·중순에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반발로 현장실사가 가로막혔다. 그러자 사측은 현장실사를 일단 건너뛰고 기업결합심사 준비에 올인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최장 120일 정도 걸린다는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해외 경쟁 당국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

물론 김상조를 대신할 후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일부 진보 성향 인물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되든 그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재벌 규제는 커녕 재벌 봐주기와 ‘혁신성장’으로 나아간 김상조를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을 기획하고 현대중공업을 끌어들이며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조선업의 “과잉” 설비·인력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조선업 정책이다. 일자리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

투쟁을 확대할 기회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되면서 매각 문제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저지 투쟁, 대우조선 현장실사 저지 투쟁 등 그동안 노동자들이 저항해 온 덕분에 반대 여론이 넓어지고 연대의 폭도 넓어졌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노조와 운동진영은 지금 기회를 잘 이용해 매각 저지 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대우조선 매각을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지 291호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를 보시오.)

국내의 기업결합 심사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결전을 미루기보다 지금 단호하게 투쟁을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야 “해외 심사 통과를 위해 노동자들도 협력하라”는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쥐 수 있다.

금속노조와 대우조선지회 등은 그동안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에 대응해 해당 기관들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의 반대 결의도 이끌어냈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매각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대중투쟁을 중심에 뒀야 한다. 거꾸로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기대를 걸며 투쟁을 미루거나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까다롭다는 유럽연합 심사조차 지난 30년간 절반이 승인됐고, 이번처럼 심층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무려 85퍼센트 이상이 승인됐다. 기업-국가 간 협상은 자본의 손익계산과 거래에 좌우된다. 정부와 현중 사측도 이번

에 설비·인력 축소를 카드로 내세워 조건부 승인을 따내려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뜻하지만 협상에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은 이런 협상에 기대기보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즉 투쟁과 연대를 발전시켜 매각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안은 있다 —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영구 공기업화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매각을 추진해 노동자 일자리를 불안에 빠뜨리는 것에 반대해, 정부에 일자리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

일 자리를 보호할 대안은 있다. 정부가 매각을 철회하고, 대우조선을 영구적으로 소유·운영해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영화화를 위한 임시관리체제로서 ‘일시 국유기업’이 아니라, 영구 공기업화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최근에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수주했다. 올해 전 세계 VLCC 발주의 64퍼센트(7척)를 대우조선이 따냈다. 일감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얼마 전 조선업계 최초로 4년 만에 생산직 신규채용도 했다(비록 수십명 규모에 그쳤지만).

그런데도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더구나 수주가 확대되는 지금, 노동자들에게 싸움 힘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며 일자리를 공격하는 것은 공분을 살 일이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단호하게 싸운다면 충분히 연대를 확대할 수 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후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문재인의 말로만 정규직화 자화자찬 지겹다

노동자 비난 말고 차별 폐지하고 정규직화하라

이정원

7월 3일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리고 서울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벌인다. 이번 파업의 주축 대열인 학교 비정규직은 3일간 파업을 벌인다.

우파 언론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해 불만을 키웠으며 불평을 해댄다. 애초 정규직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자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조금치도 관심이 없다.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자며 파업 자체를 주문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강그리 무시하고 정규직화 정책은 성공이라는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 몇 가지만 봐도 정부의 이런 주장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0퍼센트인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두 차례 공동 파업을 벌이며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병원 측에 책임을 떠넘길 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6만 명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처우도 열악하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사실상 임금 동결안을 내밀고 있다. 교육청은 교섭을 파행시키며 “파업을 할 테면 해 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7월 1일 도로공사에서는 수납원 1500명이 한꺼번에 해고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사측의 자회사 전환 강요를 거부하자 해고해 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뻔히 알고도 외면했다.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로 내몰면서까지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도 사실 안중에 없다. 민간위탁으로 잘

못 분류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곳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본다’는 수준에서만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엉터리 정규직화 탓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근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14만 명이 늘어 35만 명에 이른다. 기간제는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18만 명이나 된다. 파견 용역도 7만여 명이나 남아 있다. 또 다른 간접고용인 자회사 고용이 3만여 명이 늘었다.

이러고도 ‘급식 돌봄 대란’, ‘공공서비스 차질’ 운운하며 ‘대화로 하라’는 정부의 말은 진실성이 제로다.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파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출범 2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모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직무급제 추진

올해 5월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 조사’(1815명, 430개 기관)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이 391만 원(16.3퍼센트)이 올랐다”며 “처우가 개선되고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도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67점을 기록해 처우 개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했던 처우 개선(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이 임금에 반영된 비율은 절반 정도다.

게다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제시한 처우 개선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가 밝힌 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곳들이 상당수다. 심지어 철도 청소 업무, 여수항만공사 조경관리원, 서천생태공원 등 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특히 자회사로 전환된 경우, 그 전보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의 합의 비중

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수였다(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공공기관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할 재원을 오히려 자회사 이윤이나 관리비를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다. 결국 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매우 인색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생색내기는 위선이다. 정부는 전환자들의 임금이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 수준(정규직 대비 6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목표가 뚜렷하다. 정부가 전환자들에게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한 이유다. ‘표준임금체계’는 전환자 대다수를 임금이 가장 낮은 직무로 배치하고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을 막아 버린 직무급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환자 대다수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 임금 인상은 더 억제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점점 더 줄게 생긴 판이다.

정부는 이런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

하는 직무급제를 공공부문 전반에 계속 확대해 가려 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 물 건너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이용해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더러 울며 겨자먹기로 직무급제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직무급제가 도입된 부문의 노동자들은 직무급제를 폐기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자들이 바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자신의 일이 하찮은 직무로 낙인 찍혀 저임금이 정당화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수년째 호봉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은 현재 자신들의 임금체계가 직무급제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업무 유형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고 근속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임금 인상도 더는 안 된다는 태도다.

따라서 저임금 고착화와 임금 인상 억제를 바라는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처우 개선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처우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만만치 않으니 직접고용을 얻되 표준임금체계를 수용하고 향후 임금 수준을 올려 가자는 노동운동 일각의 ‘현실론’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킬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공동 투쟁을 확대해 가며 직접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문제투성이 민간위탁 고수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위탁 분야는 2019년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해 놓고 민간위탁 유지 방안을 내놓아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민간위탁 중 1단계 전환 대상인데 잘못 분류(‘오분류 사무’)됐거나 민간위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 업무(‘심층 논의 대상’)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골라 낸다고 한다. 게다가 그조차 해당 기관장들과 부처에 판단을 맡겨서, 또 제약이 있다. 노동자들이 정부 방안이 정규직화 폐기 방안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120건에 대해 ‘오분류’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판단 기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오분류 결정이 나도 유사 업무에 일괄 적용할지도 분명치 않다.

외주화·민영화

‘심층 논의 대상’으로 꼽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업무, 상하수도 등 겹침 업무 등에 대한 논의는 주관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된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렇게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무려 20만여 명의 정규직화 바람을 외면해 버렸다.

정부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민간 전문성 활용 등을 내세우며 민간위탁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업무의 85퍼센트가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업무들은 모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다. 마땅히 정부가 노동자들이 고용과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업무는 지금도 대표적인 민간위탁 영역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민간위탁 추진을 지시하면서 급격히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다른 민간위탁 업무들도 마찬가지다. 발전소 가동에 꼭 필요한 업무들 중 운전 업무는 용역이고 정비 업무는 민간위탁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전소 매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졌다.

정부는 효율성 운운하며 민간위탁을 옹호하지만, 그간 민간위탁은 부정과 비리,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용역비 과다 청구, 임금 착복, 업체 선정 비리 등등. 이 때문에 민간위탁이 과연 비용 절감 효과를 내기는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사코 민간위탁을 유지하려 한다. 또,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 정부는 기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외주화·민간위탁 정책에 분명하게 도전해야 한다. 지금 곳곳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정부의 ‘오분류’와 광범한 제외에 항의하며 정규직 전환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노정교섭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민간위탁 적절성 판단 기준 제시 등)하려 애쓰기보다, 정부를 상대로 민간위탁 유지 정책 폐기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사기로 드러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제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맞서 싸운 선봉장이다

민주노총은 7월 투쟁을 확대해 실질적 파업 조직으로 이어 가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이다. 비정규직 임금도 억제하고 최저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이다.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광주형 일자리 확산 등 노골적인 임금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우조선 매각 등 조선업 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 이후 노동개약 강행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여야가 노동개약 추진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으므로, 노동운동도 그에 신속히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처럼 지금 함께 싸워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공 비정규직 파업을 단지 노정교섭 추진을 위한 압박용으로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전반적인 공세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 가야 한다.

6월 28일 열린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도 현장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실질적 파업 조직과 투쟁 확대에 나설 것을 적극 촉구했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7월 3일 비정규직 파업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참가하고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정규직 노조들이 동참하도록 조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정규직도 함께 파업에 들어간다면 정부는 훨씬 압박을 받을 것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더한층 끌어올리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발판 삼아 7월 파업을 실질화해야 한다. 노동운동 좌파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며 투쟁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수단 항쟁: 군부 통치 종식 요구하며 전국적 시위

★ 미·중 무역전쟁 잠깐의 휴전... 막간극 공산 크다

★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입법회 점거하다

★ 이석기 전 의원 8·15 특별사면하라

★ 문재인 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커지는 투쟁 요구

★ 일진다이아몬드, 5년간 임금인상 억눌리다 전면 파업 돌입

★ 신도리코노조, 노조 인정과 조건 개선 요구하며 전면 파업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최미진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경조사 휴가·교통비·경력수당·생활임금 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용돼야 마땅한 것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급 경조사 휴가를 쓸 수 없다. 가정 방문에 드는 교통비도 노동자 주머니에서 나간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각종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도 유급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경력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제도 개선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무조건 가지라고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보통 아이를 10시간 이상 맡겨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8시간 이상 이용할 거면 돌보미를 두 명 이상 쓰거나, 그게 싫으면 친인척 불러 돌보게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면 혼란스럽다. 게다가 돌봐 줄 친인척이 있다면 애초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했겠는가? 정부의 비현실적인 주문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 신청을 중단하는 가정도 늘었다. 돌봄 노동자들의 일감도 줄었다. 노동자들은 이 직종을 휴게시간 예외 직종으로 분류하고 그만뒀던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책임의 극치

이처럼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대부분 소박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

하지만 여가부는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르쇠해 왔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반짝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뒷전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말대로 여가부가 “진짜 사용자”다. 임금을 비롯한 아이돌보미의 노동조건은 모두 여가부의 사업 안내서대로 정해진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지만, 예산과 사업 계획은 모두 여가부가 정하는 것이다.

그간 노동자들을 채용한 서비스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여가부가 결정권자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한다’며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여가부는 ‘우리는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

니’라며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정부와 서비스기관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동안,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한 정부가,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돌봄 일자리에서는 위탁 구조를 이용해 처우 개선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본과 배민주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여가부는 말로는 우리와 ‘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평등 정부’를 표방하면서 뒤에선 호박씨를 갑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것 말고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정부 하에서 서비스기관들은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이를 뒤집으려고 함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함소는 사실상 여가부가 결정한 것이다. 1심 판결에 따른 체불 임금(각종 법정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장관

그런데 최근 광주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의 상심과 분노가 쿨 수밖에 없다. 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려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터무니없이 협소한 기준으로 아이돌봄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돌보미는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기관은 제재를 가할 권한도 없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고, 활동 기간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마치 아이돌보미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인 양 취급한 셈이다.

그러나 위 요소들은 대부분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고 아이돌봄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조건일 뿐, 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다.

또한 1심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여가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서비스기관들은 직접 면접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수교육과 주의사항 지시 등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돌보미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고,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 소속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종속노동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위탁 구조를 이용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정부의 오랜 꼼수를 합리화해 준 것이다.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부당한 판결을 앞세워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가장 열악한 조건의 여성 노동자들을 내치는 게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대통령과 여가부 장관의 실체인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해고 낳다

양효영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결국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합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며 해고자들을 우롱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법원에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한 것이다.

요금 수납원 6700명 중 1500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대량 해고 전날인 6월 3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42명이 톨게이트 지붕 위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해고자 1000여 명은 서울톨게이트에 집결해 집회와 노숙 농성을 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자 남성 경찰들이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10여 명이 쓰러졌다. 이것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이, 비통한 심경으로 해고에 항의하는 여성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노동자들은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동참하고 7월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노숙 농성을 할 예정이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파산했음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차라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됐을 것"이라고 분노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산업 수요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조정이 예상되는 업무를 전환 예외 사유로 둔다. 이를 이용해 2017년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에서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스마트톨링(무인화) 도입으로 인력 감축을 계획한 도로공사에 힘을 실어 주는 조치였다. 국토부·기재부·노동부는 신속히 자회사 설립을 허가하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

도로공사는 기존 수납원을 해고한 자리에 더 불안정한 자회사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불법파견 판결 뒤집기,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이 2018년 노사 합의 사항(노동자 대표 6명 중 민주노총 측을 제외한 합의)이라고 정당



미래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 현재의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것이 문재인 식 '사람 중심'

화한다. 하지만 당시 자회사 전환에 합의한 노동자 대표들은 친공사 성향 관리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노조의 대표들이었다. 그중 한 명인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의 대표는 얼마 전 자회사 전환 거부 노동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도로공사의 거짓말과 꼼수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이 합의를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이 합의에 크게 반발했다. 이런 반발 때문에 합의에 서명한 당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탄핵당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거부 노동자들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공사의 임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게 "고용 안정 방안"이라는 공사의 주장은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수납원 중에는 장애인도 많은데 사실상 이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시해 놓고 "근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또한 수납원은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에게 맡기려는 여성 도로관리원은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퇴사율이 높다고 한다.

"고용 안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에 치저 떨어져 나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언론이 대량 해고 사태를 크게 보도하자 청와대와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 거부자를 공사 기간제 요금 수납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십수 년을 해 온 요금 수납 업무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바람

은 지당하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제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강요할 게 아니라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 정규직화해야 한다.

게다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기간제로 수년을 근무해야 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꼼수 부리지 말고 지체 없이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노동자 해고하는 스마트톨링 도입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도로공사가 대량 해고까지 자행하며 자회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스마트톨링 확대 계획이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톨링이란 기존 요금 수납소를 없애고, 영상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판독한 후, 차량 이동 동선을 파악해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문재인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스마트톨링을 조기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도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를 내세웠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도입에 맞춰 수납원 인력 감축을 계획했고, '몇 년 뒤면 없어질 직무'라는 이유로 직접고용을 거부해 왔다. 미래의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해 현재의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게 어떻게 "사람 중심"일 수 있을까.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이토록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받아들이면 스마트톨링 계획에 따라서 몇 년 뒤 다

시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한다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문재인이나 이강래가 말하는 "사람 중심"은 장차 수납 업무를 없애 나가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재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해고 현실을 보면 이런 말을 믿을 수 없는데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노동자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가령 퇴직자 자

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인력을 줄여 나가면 남은 수납원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해지기 십상일 것이다.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기간 불법파견으로 받아 온 차별을 시정하고자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 모든 사태의 총 책임자인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9

8.22(목)~25(일)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참가신청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 | @marxism.or.kr